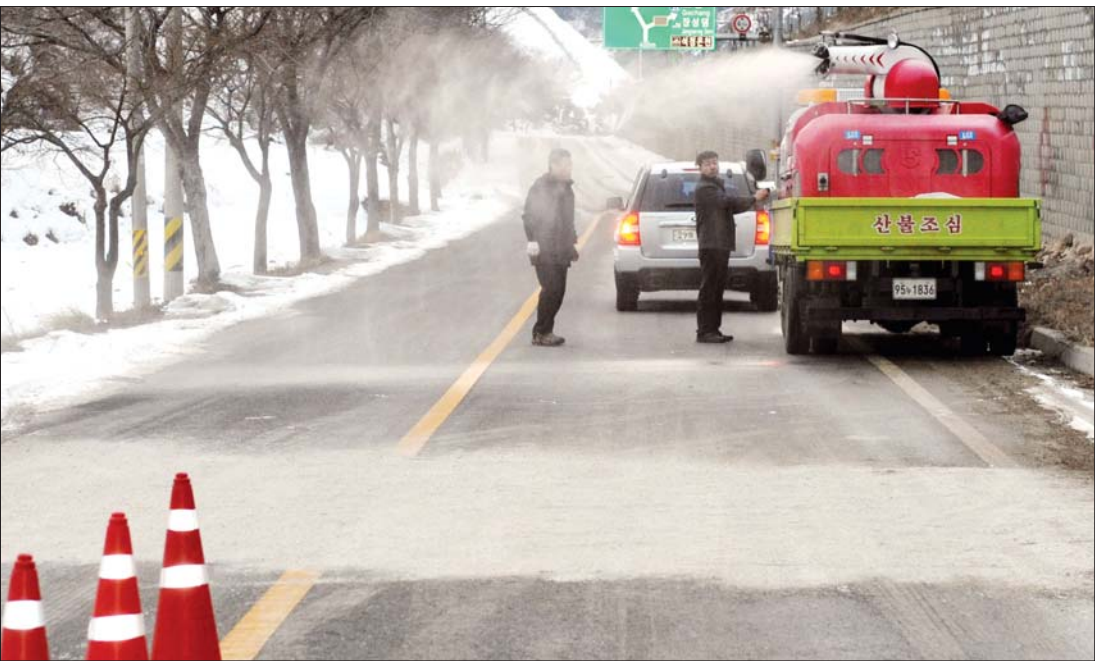


전남 첫 구제역 의심신고 장성 표정



30일 오후 장성군청 관계자들이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온 마을로 통하는 도로변에 방역 장비와 초소를 설치하는 등 '구제역 청정 전남'을 지키기 위해 안전환을 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주일전 백신접종도 했는데... 77년 청정지역 뚫리나” 불안

30일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장성지역의 축산농가들은 77년동안 지켜온 '구제역 청정지역'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며 극도의 불안감을 나타냈다. 전남도와 방역 당국 역시 그동안 구제역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여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기원하며 정밀검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날 의심신고가 접수된 직후 김모(47)씨의 농가와 인접한 장성군 장성을 덕진로로 진입하는 완전 통제됐다. “이곳은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농장입니다. 사람·차량 통행을 금지합니다”라는 경계가 적힌 진입로 안내판에서부터 극도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주민들 방역 구슬땀

김씨의 농가에서 600m 가량 떨어진 장성을 상오리에 들어서자 집 대문에는 ‘출입 통제’를 알리는 통제 라인이 설치돼 있었다. 전남도와 장성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직원 50여명은 구제역 의심농가와 인접 마을을 오가며 방

역활동을 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또 외부인의 차량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직원들의 표정에선 그동안의 ‘청정지역 사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비장한 각오가 느껴졌다.

이 마을 주민들도 신고가 접수된 직후 긴급 회의를 갖고 눈 속에서 땀을 흘리며 농약살포기가 실린 경운기 2대를 돌려 방역 활동에 들어갔다.

신고자인 김씨는 “지난 17일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오늘 일어나자마자 축사에 가보니 애지중지 키우던 소의 코에 수포가 생긴 것을 보고 군청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신고를 접수한 이후 구제역 간이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며 “부디 구제역이 아니라는 소식을 들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김씨의 축사에서 600m 떨어진 곳에서 한우 88마리를 키우는 강모(70)씨는 “지난 17일 구제역 백신 접종 이후 집 집마다 통제 라인

을 설치, 거의 고립무원으로 살고 있다”며 “지난 50년간 소를 키우면서 살았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다. 구제역이 아니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재 김씨 농가와 인접한 곳에서 소를 키우는 농가는 모두 37농가(3595마리)다. 이 중 소농가는 34곳(1550마리), 돼지농가 2곳(2500마리), 염소농가 1곳(20마리) 등으로 모두 37곳에 이른다.

정밀검사 결과 촉각

장성군 친환경 농업정책과 이정환 과장은 “의심신고를 받은 직후 전남도에서 간이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다”면서 “모조품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와서 그동안의 방역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번에 의심신고를 받은 지역 주변에 소 축산농가가 많은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랄 뿐”이라고 간절한 심정을 토로했다. /장성=이종행기자 golee@/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순천 양보해라” “누가 순천 준됐나”

4·27 보선 확정되자 민주-민노 야권연대 예고된 갈등 노출

오는 4월 27일 치러지는 순천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야권연대’ 실현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순천시 국회의원 보선에서 야권연대가 성사된다면 전체적인 4·27 재보궐 선거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차기 총선에서 호남지역 야권연대도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치적 텃밭에서의 인위적인 야권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4·27 재보궐 선거에서의 민주노동당 등 소수 야당과의 선거 공조 등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민주노동당 등을 중심으로 한 소수 야당에서는 순천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야권연대와 관련, 민주당의 ‘통 큰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차기 총선 및 대선에서의 야권 연대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순천시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타 야당에 양보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양보’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지난해 7월28일 재보궐 선거 당시 민주당은 서울 은평 을에 장상 후보를 공천하면서 ‘앞으로 있을 재보선에서 다른 정당을 우선 배려한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어 “순천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도 민주당이 당선되지 못한 곳”이라며 “민주당이 순천 보선 양보라는 진전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호남 및 광주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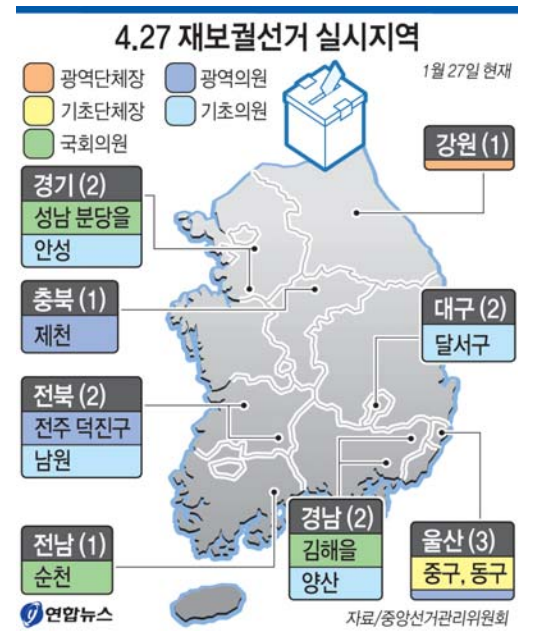
이에 반해 민주당은 야권 연대의 정신에는 공감하지만 순천 보궐 선거 적용은 ‘반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야권연대는 수도권 등에서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 후보를 이기기 위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방식은 거대 여당에 맞서 승리하기 위한 구도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에는 우리가, 다음번에는 너희가” 하는 산술적인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야권연대가 특정 정당이나 세력의 교두보 확보 차원이어서는 안 된다”며 “야권연대는 야당 후보들이 광범한 경쟁구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후보에 승리하기 위한 구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순천시가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우리가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공천하지 않음’에나 야권연대 후보를 찍으시오’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 순천 보궐선거에서의 야권연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인 민주당 사무총장도 지난 28일 “지난 7·28 재보선 당시 다른 야당을 우선 배려한



다고는 했으나 특정 지역을 말한 적은 없으며 기계적 나눠먹기 방식의 야권연대는 안 된다”고 강조한 뒤 “어느 지역이든 어떤 후보를 내세워야 이길 수 있는지 선입견 없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순천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소수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4·27 재보궐선거에서의 야권 공조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관규 시장 출마 여부 촉각

순천보선 최대변수 120일전 사퇴 조항 憲訴 검토

오는 4월 27일 치러지는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노관규 순천시장의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벌써 출마 선언자가 잇따르는 등 선거판이 달아오르고 있지만,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재선’을 한 노관규 시장의 행보에 따라 보궐선거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역정가에서는 ‘재선’인 노 시장의 정치적 입지가 순천 내에서 튼튼한 만큼 노 시장의 선거 출마가 이번 보궐선거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노 시장이 4·27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20일 전 단체장직 사퇴시한 규정에 걸려 현재는 출마가 불체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 시장이 법조인 출신인

만큼 이 규정을 철저히 검토해 헌법 소원 제기과 단체장직 사퇴시한 규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은 늦어지더라도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출마는 가능해진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줄지는 미지수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소원 제기 및 선거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출마를 강행할 수는 있겠지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상철(51) 경계대 교수는 30일 “민주주의 회복과 정권교체를 통해 원칙과 상식이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어, 사회적 약자와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치겠다”며 출마 표를 던졌다. /최권일기자 cki@

민주당 재보선 준비 본격화

최고위원회의 야권연대·공심위 구성 논의

민주당의 4·27 재보선 준비가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야권연대와 공심위 구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4·27 재보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고민은 크다. 야권 연대를 위해 일부 지역구 후보 출마를 포기해달라는 다른 야당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인물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선거의 핵심인 강원도의 상황이 좋지 않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어서 한나라당 텃밭이라는 평가가 있는 지역인데다 이광재 전 지사만큼 지역민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기초에 거론되던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와 조일현 전 의원 외에 춘천 출신의 비례대표 최문순 의원과 이 전 지사의 지역구를 이어받은 최충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의 차출설이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한나라당 후보로 일부에서 거론되는 엄기영 전 MBC사장보다 인지도가 떨어져 고민이다.

또 이 전 지사에 대한 동정론을 활용키 위해 이 전 지사의 부인이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동해 출신이자 친노·486인 이화영 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으나 경쟁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자리를 비운 성남 분당을 역시 한나라당 당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대항마가 마땅치 않아 답답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서울대 조교수를 거론하고 있지만 조 교수 본인이 부정적 반응을 보여 민주당의 예를 태우고 있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광주MBC 문화탐방

영입보증보험 가입업체, 기획여행 신고업체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 "광주MBC 문화탐방" 을 치십시오.

방콕·앙코르왓

무안↔방콕 직항 전세기

2011. 2. 17 ~ 3. 31(총 12회)

관광

799,000 부터~

캠보디아 육로

899,000 부터~

골프

1,049,000 부터~

허니문 5일

초특급호텔·럭셔리호텔

1,349,000원

● 포함 사항: ● 불포함 사항:

- 일정에 따른 현지 호텔비(2인1실), 식사비, 입장료, 현지교통비
- 국제선항공료, 무안 출/공역서, 전정보행료, 1인원 여행자보험
- 알카자소 및 전통안마 2시간 1회 포함
- 캄보디아 육로 비자 비용 별도 \$53/인 - 사전에 지참
- 특식 (태국식-사트사트, 수끼, 호텔내싸푸드, 한식-삼겹살)
- 골프장무대경비 - 골프장에 따라 캐디비, 전동카, 캐디비

크리스탈타이항공 · 광주MBC 문화탐방 전세기 사무실

【문의전화】 062)226-607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양국정부인가조인)

◎ 랜덤행여행사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471-31